

축산정보

도매시장 가격 산정방법 12월부터 변경

-비육돈, 모든 가격 구분 발표

농림부는 도매시장 돼지 평균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는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전체 평균가격 발표는 중단하고, 비육돈과 모든 평균가격을 이원화하여 발표하도록 전국 11개 도매시장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평균가격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도체 적정 지급률이 만들어 지도록 육가공업체와 농가간에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다.

농림부가 이같이 모든과 비육돈의 가격을 구분하여 발표토록 한 것은, 모든 가격이 포함된 도매시장 전체 평균가격에 의한 정산방식에 대해 비육돈 출하농가의 시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양돈농가들은 비육돈을 출하해 놓고도 모든 가격이 포함된 평균가격을 적용해 돼지가격을 정산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해 왔었다.

비육돈 가격과 모든 가격이 이원화 되어 발표될 경우, 돼지도체 등급별, 품질에 따라 차별화된 거래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특히 수출규격돈에 대해서는 수출육가공업체에서 등급별, 성별 차등가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도매시장의 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12월 1일부터 조정하도록 도매시장

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부, 돼지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모든 10% 감축 및 비축자금 등 지원

돼지 가격이 떨어지자 농림부가 돼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지난 10월 24일 돼지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돼지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98년 9월 가축통계 조사결과 돼지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나, 내수 수요는 오히려 위축되어 하반기에는 돈가급락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육두수를 감축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모든 감축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나 현재 모든 감축추세로 보아 내년 하반기까지 전년 대비 출하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모든 감축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생산된 자돈중 발육이 부진한 것이나 문제 있는 자돈을 농가 스스로 선별, 조기 도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농림부는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비인기부위에 대한 요리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기로 했으며,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자체 할인 행사를 장려하도록 했다.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무자료 거래여부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도매 가격 하락만큼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

하기로 했다. 또 육가공업체와 도매시장 등에 비축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홍수 출하되는 물량을 민간이 자체 비축토록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돼지 콜레라 박멸위해 도축 실명제 도입해야

- 도축시 혈청검사로 미접종 농가 가려내야
- 생후 40일령과 60일령 접종 가장 이상적

돼지 콜레라 박멸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지도·감독 소홀로 돼지 콜레라 박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27일 축산회관에서 열린 양돈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양돈농가의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돈포럼에서 본회 김동성 부장은 "양돈농가들은 돼지 콜레라 박멸 정책 실패시 돼지고기 수출 중단으로 국내 양돈산업이 붕괴된다는 인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양돈농가는 콜레라 박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동성 부장은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등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도축장에서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양돈농가에 통보해서 백신접종을 하게 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급백신에 대한 양돈농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급백신의 유통 및 보관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드람 중부 양돈축협의 정현규 부장은 "양돈인들이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의 보관온도도 점검하지 않아 백신을 올바르게 접종했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장은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중 21% 정도

가 이유전후의 25일령에 접종하고 있었으며, 20% 정도는 40일을 전후하여 1회 접종으로 그친다는 것이다.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은 생후 40일령과 60일령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농·축협, 조합원 대출금 16조7천억원 상환 연기

- 내년말 만기 도래분 2년간, 대출금리도 2% 인하

농협은 조합원 대출금 19조6천억원 가운데 내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15조7천억원(전체 대출금의 80%)의 상환 기일을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10월 27일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대의원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국제 통화기금(IMF)사태 이후 농민 조합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의 시중금리 하향추세를 감안해 다음달 중으로 각 회원농협이 자율적으로 조합원 대출금리를 평균 16.5%에서 14.5%로 2%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협도 축산농가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호금융대출금 9천9백여억원 가운데 내년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7천4백20억원의 상환기일을 2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도 14.5%로 2% 내리기로 했다. 농·축협의 관계자는 이번 상환기일 연기조치와 이자율 하향 조정은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가부채 경감방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재도약 및 친환경 농업 원년의 해 선포

-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제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지난 11월 11



일(수) 농촌진흥청 연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1988년을 “농업·농촌 재도약 및 친환경 농업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농업 분야의 제2건국 운동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적극 참여하자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유달영 한국유기농업협회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포장 수상식도 가졌다. 양돈부문에서는 송영익(세원 양돈단지 대표)씨에게 산업포장이 수여 됐으며, 이종주(백운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 권순영(경기도 이천)씨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백운양돈단지 이종주대표는 본회 고성지부 회원이다.

■ 농가부채 원리금 75% 상환 연장 방침

-김종필 총리, 농업인의 날 행사장서 밝혀

농가부채의 원리금 75%가 상환 연장될 방침이다. 김종필 총리는 지난 11월 11일 농촌진흥청 연찬관에서 열린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치사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해 농가부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내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부채의 원리금 75% 정도가 상환을 연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내년까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29조7천억원의 농가 부채중 75%에 가

까운 22조원을 상환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내역은 2조7천7백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액중 1조5천억원, 4조6천8백억원인 농업경영자금중 3조8천억원, 21조 1,000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대출자금중 16조7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 양돈인, 부채 상환 연기 대상자 적을 듯

-상환연기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해야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 농림부에 건의한 농가부채대책안에 대하여 많은 양돈인들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부채 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돈농가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많아 양돈인들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자금 연기 대상자 중 “98년 10월 1일 현재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본인 및 동거 가구원분)중 1주택을 제외한 농림업용외의 부동산(토지, 건물)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정책자금 연기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양돈농가들이 농장에 주택이 있는 것 외 자녀들의 교육으로 인해 시내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상당수가 연기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농림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액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지방세 과표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시가로는 1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부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한우, 낙농, 시설원에 등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계획이어서,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양돈분야의 부채 상환 연기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 “양돈농가 부채 상환 능력없다”

-생산비 못미쳐 이자 상환도 어려워

양돈농가가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안고 있는 부채는 올해 6월말 현재 3천2백억원으로 나타났다. 농가수는 4,286농가로 이들 농가들은 평균 7천5백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 98년 6월 현재 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4,624농가이고 이들 농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육두수의 75%임을 감안할 때 전기업종 대부분의 농가가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자율이 연 5%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 발생액만도 연간 1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황장수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농가가 정책자금 부채만큼 상호금융이나 기타 부채를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돈농가 대다수가 1억5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문제는 부채 규모보다 양돈농가의 부채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부채 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한우, 낙농, 시설 원예 등 상대적으로 불황이 깊었던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황장수 사무총장은 “농가들끼리 연대보증을 썼기 때문에 한농가의 도산은 다른 농가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가축분뇨 해양투기시 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입법예고

-환경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환경부는 가축분뇨를 해양에 배출할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11월 3일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를 통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문의 : (02)500-4296, 환경부 수질보전국

■ 사료업계 올해 6차 사료가격 인하

-IMF 이전 보다 8.3~12% 상승 수준까지 회복

환율 안정세와 국제 곡물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료업계에서는 제일먼저 (주)퓨리나코리아와 우성사료가 금년들어 여섯번째로 지난 10월 21일부터 양돈용 사료가격을 각각 4.0%, 3.7% 인하했다. 축협중앙회도 10월 21일부터 출고되는 사료에 대해 양돈용 4.7%, 비육우용 4.1%, 낙농용 3.4%, 양계용 2.9%를 인하했다. 천하제일사료는 10월 23일부터 사료 가격을 평균 4.5% 인하했다. 이같은 연쇄 가격 인하로 사료가격은 축협 양돈용 사료를 기준으로 할 때 IMF 이전 보다 8.3% 상승된 수준까지 내렸다. 축협은 IMF구제금융 이후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사료가격을 40.1%나 인상했었다.

(주)퓨리나코리아와 우성사료, 축협 등의 이번 인하조치로 사료업계에서는 또 한 번 사료가격의 인하를 적극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드람 사료는

26일부터 약 4% 인하했다.

푸리나코리아와 우성사료는 최근의 국제원료 가격의 안정세를 반영하고, 돈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국내 첫 O-157균 감염환자 발생

-복지부, 수입식품·도축장 관리 강화 지시

병원성 대장균 O-157균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서울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김모군(17살)의 가검물에서 분리해 검출한 O-157균의 의심균주를 국립보건원이 정밀 검사한 결과, 배로톡신을 생산하는 장출혈성 병원성 대장균인 O-15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장균이 지난해 9월 미국 네브라스카주산 수입 쇠고기에서 검출됐던 O-157:H7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부 등에 통보해 수입 식품과 도축장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 당정, 농가부채 1조4천억원 2년 상환 유예 결정

정부와 여당은 11월 5일 내년말까지 농민들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2조5천억원의 정책자금 중 1조4천억원에 대해 2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농·축·임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자금 중 내년말까지 상환도래하는 13조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을 2년 연기하고 금리도 2% 인하하기로 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부실로 판정된 영농법인 등의 원활한 제3자 인수를 위해 인수자금 1천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중 정책자금의 금리를 6.5%에서 5%로 인하해 달라는 요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농림부, 농업용 면세유 공급 전산화 추진

농림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를 전산화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면세유 전산화 프로그램을 11월 30일까지 개발 완료하여 99년까지 2,800개 전 대상조합에 설치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일부지역에서는 농가별 영농규모, 농기계 사용량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세유를 공급함에 따라 면세유가 부족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농작업에 필요한 물량보다 더 많이 공급받아 농작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코자 면세유 공급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유 전산화는 주요 농기계의 시간당 작업 면적 등 영농규모, 농기계 이용도 등에 따라 면세유 공급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입력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 농림부, 농림관련 규제 51.8% 폐지키로

농림부는 지난 10월 26일 제1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림부의 규제업무를 701건으로 확정하고 그중 75.3%인 528건을 금년내에 정비키로 하고 51.8%인 363건은 폐지하기로 심의·확정하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부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할 법률이 총 19건이라고 밝히고 연도내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養豚**